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논의체계 가동!

-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의학·경제학·법학·응용수학 등 각계 전문가 참여로 방역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다각적 분석
- 과학적 근거 기반의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논의

【관련 국정과제】 84-5.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16일(화)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 대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범한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는 「감염병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감염병 위기 시 시행되는 방역 및 사회대응 조치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유행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과 수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심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분과위원회는 의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복지·교육·외국인 정책, 위기소통, 응용수학, 법학, 보건환경, 보건윤리 및 현장대응기관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신설 목적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핵심 안건으로서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 및 사회 대응조치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사회대응 조치는 감염 억제에 효과적이었으나 장기화에 따라 의도치 않은 사회·경제적 영향이 확인되기도 했다”라며,

“사회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살피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감염병 위기 시 사회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과 일관성을 갖춘 과학적 방역·사회대응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분과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다분야 전문가들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 운영하여, 유행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도출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 구성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정병희 (043-719-9074)

□ 구성 현황: 총 18명(공무원 1명, 민간인 17명)

□ 임기: 2026. 5. 15. ~ 2028. 5. 15.

연번	전문분야	이름	소속
1	예방의학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보건시학과
2	감염내과	김진용	인천광역시 의료원
3	역학, 예방의학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4	소아청소년감염	최은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5	가정의학과, 공공보건, 예방의학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6	거시경제학, 노동경제학	김선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7	인구통계, 국제이주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경제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9	고용정책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10	사회정책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보건학	박윤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12	이민정책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13	헬스커뮤니케이션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4	생물수학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15	헌법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6	건축환경설비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의료윤리학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8	당연직	최홍석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